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항' 거듭나나

해수부 '카보타지 룰' 3년간 유예 ... 목포·인천·평택·군산·울산항엔 적용

목포시 "물량 감소로 경제 악영향" 반대

해양수산부가 시행을 검토중인 '카보타지(Cabotage)룰'로 인해 광양항이 '자동차 환적 허브항'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출차 화물을 취급하는 목포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울산항에 '카보타지 룰'을 적용하고, 광양항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도는 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전남도, 목포시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박법 제6조를 근거로 외국국적 선박의 국내 항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는 카보타지를 시행과 관련해 최근 전국 지방정회의를 열었으며, 광양항에만 3년간 법적용을 유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고 있다. 카보타지룰이 적용되면 외국국적 선박이 목포, 군산, 평택, 인천, 울산항을 오가면서 자동차 환적물량을 실어 나를 수 없게 돼 환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적용이 유예된 광양항으로 수출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울산, 군산 등의 차량 환적수출량이 광양항으로 집중돼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14선석 가운데 2선석을 환적차량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양항은 지난해 말 114만대를 환적했으며, 해수부의 조치로 2020년에는 18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광양항 배후에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 카보타지(Cabotage)를 외국국적 선박이 국내에서 항간 운송을 할 수 없다는 선박법의 규정으로, 사실상 그동안 관행처럼 지켜지지 않았다.

기아자동차의 수출물량을 책임지고 있는 목포항의 물량 감소를 우려한 목포시는 해양수산부의 이 같은 입장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목포시는 목포신항의 경우 지난 3월 국제자동차부두를 개장했으나 신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서 카보타지까지 시행된다면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시는 특히 기아자동차 수출물량도 광양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목포권 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는 카보타지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카보타지 시행 취소를 바라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광양항의 '자동차 환적 허브항'에 따른 목포항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항 수출물량 38만대 가운데 환적 차량이 1만200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카보타지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군산, 울산 등 환적 차량이 많은 곳"이라며 "환적 물량이 줄어드는 목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거점항구인 광양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남도 노인 일자리 평가 4년 연속 대상

인센티브 국비 30억 받아 기초단체부문 여수시 영예

전남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고 영예인 대상(전국 1위)을 수상했다.

기초자치단체부문은 여수시가, 수행기관에는 강진 노인복지센터, 나주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

브로 국비 30억원을 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2017년도 노인일자리 3000여 개를 추가로 창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4년(2013년~2016년) 연속 노인일자리 대상을 수상해 국비 116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1만9000개를 만들어 지역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지난해 전남도는 462억원의 투입해 512개 사업, 2만3000개의 노인일자리 창출했으며, 노인일자리 활성화 워크숍과 노인일자리 창출 협의회를 2차례 개최하는 등 양질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조오섭-이은방 2파전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국민의당 이은방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은 26일 오후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조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는 조 의원과 김영남 의원이 참여했으며 개인별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더민주 소속 의원 13명 중 2명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다른 2명은 투표 기권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로 일찌감치 합의를 이은방 의원과 후반기 의장을 놓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전체 시의원 22명 가운데 13명을 차지해 8명인 국민의당(1명 무소속)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어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국민의당 측에 원 구



조오섭 의원 이은방 의원

성 협상을 제안하고 협상이 타결된 후 의사일정을 정하지고 요구할 예정이다. 제1당의 지위를 활용하려고 의장단을 의석 수에 따라 나누는 국회석 배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측의 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 의장단 선거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의회는 애초 다음 달 8일 개원하는 임시회 기간에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어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국민의당 측에 원 구

명현관 전남도의회장 "전남·경북 상생학속 건립하자"

도의회, 상임위 대폭 개편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은 지난 24일 경북도의회에서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 할 길'이라는 주제로 방문연설을 했다.

이 자리엔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과 경북도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연설은 지난 3월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상생전략 사업선교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양측 의장이 동시화합발전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매년 한 차례씩 방문연설을 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남·경북 학생 교류를 위한 각급 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도권 대학생 교류를 위한 전남·경북 상생학속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는 이날 일정을 마지막으로 10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역할을 마무리지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최근 10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대폭 개편했다. 이날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이날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안은 기존 기획사회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안전행정환경위원회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로, 건설소방위원회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로, 농수산위원회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이종희기자golee@kwangju.co.kr

윤장현 시장 中 광저우 방문

윤장현 광주시장은 중국 광저우(廣州)시와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방문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2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문화콘텐츠·에너지산업 분야 시장 개척을 위해 27일부터 3박 4일간 광저우를 방문한다.

이번 윤 시장의 중국 방문에는 광주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경제계, 문화계 인사, 공연단 등 200여명이 대거 동행한다. 윤 시장은 광저우시가 주최하는 '광주-광저우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고, '한·중 현대미술 20인전' 개막식과 '정음성 음악축제'를 관람한다.

이어 '광주 세일즈데이' 행사로 열리는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상담회, 관광 설명회, 투자환경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기업과 함께 시장개척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손잡은 더민주 시·도지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종 총복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더민주 참총은지방정부위원장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상호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이준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연합뉴스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확충 노력해달라"

더민주 소속 시·도지사 중앙당에 요청 ... 더민주, 당론 채택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6일 중앙당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더민주는 재정확충 방안을 포함, 지방 자치권 강화 방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제안문을 발표했다.

제안문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권

선택 대전시장, 이준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총복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안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는 불참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또 누리과정 비용 등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며, 정부와 시도지사간 정책논의를 위한

'중앙-지방 정책결정협의체'도 필요하다"며 "나아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분권형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참총은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등을 포함, 지방분권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방재정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찾아가는 예산정책

협의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역시 중앙집권과 분권이 있어 기존의 틀이 파괴된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과 협치를 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제안문에서 구의역 사고 등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할 것과,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할 것 등도 건의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추증, 척추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